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여

1956년 창간된 月刊『考試界』가 금년 6월호(통권 796호)로써 창간 6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68년 동안 月刊『考試界』를 변함없이 애독해 주시는 수많은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한국의 잡지는 1908년에 발행된 최남선의 『소년』이 그 최초로 알려져 있다. 다가오는 10월호는 月刊『考試界』가 통권 800호가 된다. 현재 6월호를 기준으로 순수 문예지인 『현대문학』만이 통권 822호를 맞이한다. 자유당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서 민의를 대변한 『사상계』와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학원』, 대중지 『아리랑』, 여성지 『여원』 등은 현재 폐간되었거나 휴간중이다.

요즈음 출판계 및 잡지계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다. 月刊『考試界』와 같은 전문잡지는 독자층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난 68년 동안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하여 왔다는 점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축하받고 격려받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 달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에 돌입하게 된다. 코로나19와

작별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게 맞다. 감염병 유행이 반복되고 주기가 짧아지는 걸 감안하면 조만간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한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페스트나 스페인 독감처럼 코로나19가 촉발시킨 거대한 변화다. 그게 새로운 희망이 될지, 암울한 재앙이 될지는 알 수 없다. 결국 미래는 팬데믹을 겪으며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1년을 맞았다. 대통령실은 "비정상을 정상화했다."며 한미동맹 강화, 노동개혁, 탈원전 폐기 등을 지난 1년간의 성과로 꼽았다. 윤 정부는 전임 정부 때 이완된 한미동맹을 재건해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고 북핵 억제력을 보다 실질화하였다. 막혀 있던 대일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 한·미·일 3각 협력의 토대도 정상화시켰다. 거대 귀족노조의 폭력과 횡포를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것도 과거 정부는 못 한 일이다. 탈원전 폐기도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취임 때 약속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은 첫발도 못 뗐다. 대내외 여건이 안 좋긴 하지만 경제 활성화나 민생 개선에서도 크

정 상 훈

- 月刊『考試界』발행인
- 도서출판 고시계사 · 미디어 북 대표
-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유라시아세계본부 지원의장



게 성과를 냈다고 보긴 어렵다. 입법권을 독점한 민주당 탓이 큰 것도 사실이다.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역전세 폭탄 등 경제악재도 산적해 있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 보다 겸허하고 진중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이 국민공감을 이끌어낸다면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변화의지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 순서이며 시작이다. 대통령 리더십의 핵심은 공동체가 함께 상상할 수 있는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지속해서 이를 공유하여 흠어지는 국민 마음들의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건 정치는 사람들을 함께 살게끔 하는 것이고, 함께하기 위해 대통령의 소통은 필수다.

흔히 법을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검찰·법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법권력은 종종 국민을 기만하거나 법을 수단삼아 자신들을 특권화한다. 특히 판사에 대해서

는 우리 헌법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걸 판결로 드러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개인의 성향이나 주관적인 소신을 ‘법관의 양심’이라는 말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성찰하여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법관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중심에 서는 일이 많아지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미국 오픈AI사에서 세계 최초로 발표한 챗 GPT 열풍이 글로벌 규모에서 강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그 확산 속도는 역대 어떠한 앱 서비스보다 사용자 확보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2억 명 사용자 확보에 단 2개월이 걸렸다.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 시장에서 거대한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올 연말이면 챗GPT 기능을 이용해서 사안을 구술로 설명하면 간단한 소장은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가 대중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변호사 숫자의 증가와 맞물려서 현재 변호사 업계의 불황은 레드오션에 접어들어 오래되어 심각하기 그지없다. 인공지능형 서비스는 어찌 보면 법조 전체에게는 위기이자 또 다른 기회일 수가 있다고 본다.

일상에서까지 혁신적 파괴를 몰고 오고 있는 챗GPT 시대를 맞이하여 기초 법이론을 탄탄히 하고, 아날로그 지식으로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어 창의력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구축해야 한다. ‘생각 근육’이 튼튼한 변호사만 생존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개가 기준미달이라고 평가해 사실상 로스쿨 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로스쿨 교수와 법조인, 언론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로스쿨 평가위’는 로스쿨 평가를 담당하는 법적 기구다. 교육부 최종 결정이 남았는데 기준미달 대학의 규모가 전례 없이 커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로스쿨의 최근 5년(2017년 3월~2022년 2월)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받은 로스쿨이 9개에 그치고, 나머지 16개 중 13개는 ‘조건부 인증’, 3개는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것이다.

5년 전 평가의 경우 23개가 ‘인증’, 2개가 ‘조건부 인증’을 받았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한

시적 불인증’ 평가는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이번에 ‘조건부 인증’을 받은 13개는 서울소재 명문대학 등이고,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3개 모두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평가결과를 확정하면 전자는 1년 이내 추가평가를 실시한다. 또 후자는 2년 이내 모든 영역에 대해 재평가받고 재정지원도 삭감될 수 있다. 원래 로스쿨 제도는 ‘고시낭인’을 없애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변호사를 배출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지금은 오히려 ‘변시낭인’을 양산하는 역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번번이 본회의 상정을 무산시켰다. 만일 야당인 민주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고자 한다면 102030 세대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공정한 시험제도’를 확립해 보장하는 것이 진정 국민들에게 할 도리일 것이다. 집권여당도 선거철만 되면 그 부활을 약속하는 듯하다가 결국 하지 않은 잘못을 이제는 고쳐야 할 것이다.

月刊『考試界』는 6월호(통권 796호)를 발행하며 새로운 100년을 향하는 출발선에서 있다. 법치구현을 위한 정론을 세우기 위해 일어선 창간 당시의 초심을 생각하며 격변하는 법조계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새롭게 변화하는 月刊『考試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한다.